

# 목 괴사되고 다리 잘려...유기동물 늘어나

### 동물구조119, 작년 265마리 구조...2019년비 증가 “다각적 측면서 문제...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변해”

사회적으로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 동물구조 단체가 지난해 구조한 동물 수를 발표했다.

구조된 개와 고양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더 늘었는데, 동물 관련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나는 추세라고 우려하고 있다.

24일 동물전문 구조단체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1년간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한 개·고양이 총 265마리를 구조했다. 개 215마리, 고양이는 50마리다.

이 수치는 2019년 동물구조119가 구조했던 동물 수보다 소폭 늘어난 것이다. 동물구조119는 제작년에 개 234마리, 고양이 16마리 등 총 250마리의 동물을 구조했다.

사고 유형 별로 보면 개는 목줄로 인해 목이 괴사된 경우, 플라스틱통을 쓰고 다니다 아사 직전에 구조된 경우 등이 있었다고 한다. 고양이는 다리가 절단되거나, 철사에 묶여 죽어가던 경우, 플라스틱이 목에 끼인 사고 등이 있었다.

구조 현장 별로 보면 번식장 78마리, 애니멀호텔(동물을 모는 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만 기르는 일에는 무관심해 방치하는 사람) 61마리, 서울시보호소 11마리 등이라고 이 단체는 전했다.

동물구조119는 지난해 구조 동물의 85%인 197마리는 '공익 구조'로 비용을 받지 않았고, 개인 요청에 의한 구조 등은 별도 비용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한편 유기동물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지자체 동물구조119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유기동물 실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기동물은 ▲2015년 8만 456마리 ▲2016년 8만8561마리 ▲2017년 10만789마리 ▲2018년 11만 8697마리 ▲2019년 13만3462마리가 발생했다.

이 단체는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유기동물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 분석한 결과를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임영기 동물구조119 대표는 지난해에도 유기동물의 수가 늘어났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코로나19 사태가 (유기동물 수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분석해



동물전문 구조단체 '동물구조119'에 따르면 이 단체는 지난해 1년 간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한 개와 고양이가 총 265마리를 구조했다. 개는 215마리, 고양이는 50마리다. 사진은 동물구조119가 구조한 동물들.

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동물 관련 단체들도 지난해는 물론, 지속적으로 유기동물이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민경 동물자유연대 활동가는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만 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예전엔 유기견의 품종이 시골이나 마을에서 키우는 떠돌이견이 많았다면 요즘엔 큰(유명한) 종의 동물(개)도 버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각적인 부분에서 유기동물

문제가 커지고 있다”면서 “유기동물을 지자체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예산 책정 등 경제적인 문제도 있다고 본다. 그래서 좀 더 심각한 문제로 변해가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동물권 행동 카라의 고현선 활동가는 유기동물 수 증가와 관련해 “현장에서 느끼고 있다”면서 “저희는 구조 요청에 의해서 그걸 느끼게 된다. 구조 요청이 이전보다 늘어났다”고 말했다.

신봉우기자

## ‘울동 똑바로 안해’ 아동 11명 학대 유치원 교사 징역

법원이 울동을 제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생 11명을 학대한 혐의를 받은 전직 유치원 교사에게 징역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지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치원 교사 A(28·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 아동학대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2월 2일 자신이 일하던 광주 모 유치원 강당에서 발표회 울동 연습 지도 중 5살 원생 B군의 머리를 밀어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등을 때리는 등 같은 달 13일까지 원생 11명을 상대로 39차례에 걸쳐 신체·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원생들이 울동 연습 중 동작을 틀리게 했거나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유치원 담임교사로서 아동을 건강하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자라도록 보호해야 할 지위·책임이 있음에도, 정당한 훈육 방법을 벗어난 행위를 반복했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합의를 통해 부모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A씨의 학대 행위가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힐 만큼 중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우리 아들 체온 높다고 진료 늦춰? 응급실 행패 40대 징역

감기 증상으로 체온이 높은 아들에 대한 코로나19 진단 검사 절차를 따르지 않고 진료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행패를 부린 40대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5일 오전 0시 29분께 광주 모 병원 응급실에서 벽돌을 유리문에 3차례 던지고 문을 발로 차 깨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시간대 병원 보안요원에게 휴대 전화를 던져 폭행하고, 벽돌을 든 채 던질 듯이 의료진을 위협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감기 증상을 보인 자신의 아들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아들의 체온이 높아 병원 앞쪽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진단 검사를 먼저 받아야 진료가 가능하다’는 안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만취해 병원을 방문, 여러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방해했다. 폭행 또는 재물손괴죄의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도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다만, A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죄질에 상응하는 사회봉사를 함께 명한다”고 설명했다.

## ‘광주형 일자리’ GGM 건설현장서 50대 추락사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숨졌다.

23일 전남 합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30분께 합평군 월야면 빛그린국가산업단지 내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에서 50대 남성 A씨가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이날 9m 높이 공장 천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편 글로벌모터스 공장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8월19일에도 60대 근로자가 고가사다리차에 치여 숨졌으며 박광태 대표가 사과했다.

## 박임규 보성경찰서장,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동참

보성경찰서(서장 박임규)는 행정안전부는 최근 보행약자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 보호를 최우선하는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박임규 보성경찰서장도 이 챌린지 운동에 동참했다.

보성경찰은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증가함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구조개선, 각종 교통법규위반자에 대한 단속 및 홍보활동 등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다.

박임규 보성경찰서장은 “이번 챌린



지를 통해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 캠페인이 많은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선진교통문화정착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성=김택순기자

## 제자 추행 전 대학 교수, 2심도 징역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전직 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2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광주 모 대학 교수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다만, 1심이 내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2년 명령을 면제했다.

A씨는 2019년 3월 9일 서울 한 술집에서 대학원생 여성 제자에게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학원생 제자들과 서울에

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저녁 식사를 겸한 술자리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같은 해 6월 해임됐다.

재판부는 “A씨는 자신의 지도를 받던 전공인의 피해자를 20분 넘게 추행, 죄질이 나쁘다.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동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해 아동·청소년·장애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를 위험성까지 추단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취업 제한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고 봤다.

최이슬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문의 : junsol@junsol.com

준솔루션